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재 난 안 전 실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재난안전실

☐ 총 5건 건의

☐ 목 록

연 번	건의제목	건의부서
1	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책임 명확화를 위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정 요청	중대재해 예방과
2	소규모 원료·제조물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정 요청	
3	방재시설 설치기준 합리화를 위한 「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」 개정 요청	도로시설과
4	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 건의	
5	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전문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건의	

# 법령 · 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1.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책임 명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</p> <p>(중대재해예방과, '25. 8. 7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·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 '경영책임자등'을 규정하면서, 지방자치단체 사업장·시설에 대한 경영책임자를 '지방자치단체의 장'으로 규정함</li> </ul>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자치법상 대의기관(지방의회), 집행기관(지방행정기관, 교육청)의 권한·책임이 독립되어 있음에도,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<u>지방의회 및 시·도 교육청 소관 사업장·시설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</u></li> <li>○ 각 경영책임자가 소속된 '기관'의 개념·범위를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, 의무 주체 및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(경영책임자 처벌 시 함께 처벌되는 법인 또는 기관)이 누구인지 불분명함</li> </ul>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영책임자인 '지방자치단체의 장'에 지방자치단체의 각 <u>사무를 분장하는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의장(대의기관), 교육감(교육·학예사무 집행기관)을 포함할 수 있게 개정 건의</u></li> <li>○ <u>'기관'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</u> 건의 (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, 지방행정기관, 지방의회, 시·도 교육청 등 '경영책임자등'의 소속 기관을 명시)</li> </ul>	<p>법무부</p> <p>고용노동부</p> <p>국토교통부</p> <p>환경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2. 소규모 원료·제조물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</p> <p>(중대재해예방과, '25. 8. 7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p>○ 중대재해처벌법은 '원료·제조물'에 대해 소상공인 등 <u>소규모 사업장에도 제한 없이</u> <u>안전·보건 확보의무 부과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p>○ 법상 인력·예산 확보 등 의무이행과 무거운 형사처벌은 소상공인 등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 <u>과중한 부담이 되며, 실효성 있는</u> <u>의무이행도 담보하기 어려움</u></p> <p>○ 소상공인 등 사업주는 식품위생법 등 개별 법령 위반 시에도 이미 <u>인명 피해에 대한</u> <u>형사책임을 직접 부담하므로,</u> <u>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중복 제재의</u> <u>우려가 있음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p>○ 원료·제조물에 대한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적용 대상에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<u>'소상공인의</u> <u>사업 또는 사업장'을 제외하도록 건의</u></p>	<p>법무부 환경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3. 방재시설 설치기준</p> <p>합리화를 위한 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요청</p> <p>(도로시설과, '25. 8. 22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존 방재지침은 공용터널의 구조적 한계 등 현실성을 반영한 방재시설물 설치기준 및 운영 인력 기준이 부재</li> </ul>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재지침에 따른 방재설비 설치 공간부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도로폭 축소 등 <u>현실성을 반영하지 않음</u></li> <li>○ 관리사무소 운영인력 편성 기준 부재로 24시간 감시 및 <u>현장대응을 위한 인력 부족</u> 등 운영 여건이 어려움</li> </ul>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치 공간 부족 및 타 안전분야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등 <u>설치 예외 혹은 완화 규정 신설 건의</u></li> <li>○ <u>관리사무소 운영인력 구성 및 배치기준 신설 건의</u></li> </ul>	<p>국토교통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4.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개정 건의 (도로시설과, '25. 9. 10.)</p>	<p>□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에서 전대 의심 사례가 있으나, 일반재산이라 <u>불법 전대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운</u> 실정</li> </ul> <p>□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강제 규정이 없어 확인이 곤란하며, <u>일반재산은</u> <u>불법 전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부재</u></li> </ul> <p>□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실태조사 시 <u>임차인의 자료 제출</u> <u>의무를 명시</u>하고, <u>불이행 시 과태료</u>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의</li> <li>○ 현재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만 적용되는 <u>벌칙을 일반재산까지</u> <u>확대</u>하도록 건의</li> </ul>	<p>행정안전부</p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<p>5.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전문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건의 (도로시설과, '25. 9. 16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이나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은 <u>일반재산 위탁을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음</u></li> <li>○ 반면 「지방공기업법」에는 <u>지방공단의 지하도상가 관리 근거가 존재함</u>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지방공기업법」에는 지방공단의 관리 근거가 있으나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에는 위탁 규정이 없어 법적 안정성이 미흡함</li> <li>○ 개발 중심 규정으로 인해 지하도상가의 유지·안전관리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u>일반재산 수탁기관에 지방공단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의</u></li> </ul>	<p>(행정안전부)</p>